

● 2008년까지 우수 이공대  
연구소 100여 곳 지정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우수 이공계 대학연구소 100여 개를 선정, 연구소당 5억~10억 원의 연구·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추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공계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R&D) 능력을 강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초과학, 원천기술, 공공, 미래분야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선정된 연구소는 대학 연구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석·박사과정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과학이나 원천기술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이끌 수 있는 1~2개 분야에 대해 연구소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연구실적을 올리면 그 지원규모를 20억~30억 원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이 해결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연구전임인력 확보, 대학원 협동과정 운영, 대학원생 장학금지급, 연구기자재 구입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지원체비를 끝마

쳤다. 연구소 운영에 대한 조직구성에 따르면 연구소장, 연구관리실장, 연구팀장 등은 대학 전임교수를 임명하고 일부 학과 소속 교수도 활용할 방침이다. 선정된 연구소의 경우 5년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며 적어도 2년에 한번 평가를 실시, 균형을 잡아 나갈 것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던 대학연구소 지원사업을 이공계 연구·개발과 관련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 울산에 국립대 유치 결정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울산시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울산 국립대 유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인구 100만명의 광역시에 국립대가 없다는 것은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울산에 국립대를 유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립대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 국립대를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혀 구조조정 과정에서 통합되는 다른 지역 소재 국립대를 울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울산에 설립될 국립대의 규모와 설립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대학연구개발비  
지원방식 개선

대학연구개발비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집행이 잘못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연구개발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또 서울 등 대도시 지역 보다 교육·문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층 영유아와 학생, 청소년의 교육, 문화,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사업에 83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재로 2004년도 제3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적자원 관련 정부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연구개발비 지원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표준화된 지원방식을 수립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산재된 대학연구개발비 지원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기획단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연구개발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8개 부처가 협의해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모두 449개 기관 675개 프로그램에 특별교부금 83억 원을 지원해 기초학력 부진 아 지도, 도서관 기능활성화, 공공·민간 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투자우선지역 안의 청소년 공부방과 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 시범 지역에 투자우선지역 1개를 포함 시키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 ● 8개 부처 대학연구비 감찰

대학 교수들이 정부지원연구비를 유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인적자원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각 대학의 연구비 운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지원 연구비를 유용한 교수가 감찰에 구속되는 등 비리가 잇따라 연구비 관리체제 자체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6, 7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각 대학의 연구비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뒤,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의 연구비 관리실태 점

검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국장과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과 실무작업반이 구성되며, 실무작업에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 8개 부처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등도 간사기관으로 지정돼 함께 참여한다.

연구비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될 실무작업반은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빼돌리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과 대학 중앙본부에서 관리해야 할 연구비를 해당 연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마다 별도의 공모와 선정과정을 거침으로써 같은 연구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연구비 지원방식을 표준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실무작업반은 특히 연구비 부당집행, 허위 정산, 연구과제 중복 신청 등의 그릇된 관행이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중국의 ‘연구윤리현장’과 같은 연구자윤리

강령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측은 “한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총액의 5분의 1이 넘는 1조 609억 원(2001년 기준)이 대학에 지원되고 있으나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부족과 관련 제도 미비로 유용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자유로운 연구풍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합동 실무작업반은 연구비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대학의 정부연구개발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11월쯤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 학생부 위·변조

#### 원천봉쇄 추진

현재 고교 2학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오는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부터 수험생들이 일일이 학교생활기록부 등 전형자료를 들고 다니며 대학에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대학과 고교가 협의, 직접 인터넷을 통해 전형자료를 요청,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학생부에 대한 위조·변조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신속한 입시전형자료의 활용에 따라 대입 전형의 기간 단축과

함께 비용 경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시모집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수험생들의 학생부가 들어있는 CD를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인권침해 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함께 2002·2004학년도 대입 수시 1·2학기 모집에서 나타난 수험생들의 학생부 위조 사건 등과 관련, 입시전형자료의 전산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들은 수험생들의 원서를 인터넷으로 받은 뒤 수험생의 고교와 대학을 중계하는 KERIS에 수험생의 주민등록번호와 학교 코드를 보내 학생부 등의 전형자료를 요청하면 KERIS는 수험생들을 고교별로 분류한 뒤 해당 고교에 대학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지를 통보한다. 해당 고교는 KERIS의 승인 여부를 접수한 뒤 수험생에게 전형자료를 대학에 보내도 되는 지에 대해 문의, 동의하면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집적된 학생의 전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대학에 보내주거나 대학에서 가져가도록 한다. 이 때 전형 자료는 암호화됐기 때문에 대학에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측은 “이 방안은 논란을 빚고 있는 NEIS를 기반으로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고교와 대학이 협의해 전형자료만 활용하도록 하는 조치”라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중”이라고 설명했다.

### ● ‘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 계획’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입학정원을 자율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강화, 사실상 증원이 어렵도록 하는 동시에 오히려 대학 구조개혁이나 지방대 육성 등과 연계, 강력한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산업대 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 계획’을 마련, 전국 대학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학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이 2005학년도에는 교원 및 교사확보율 각 100%와 수익용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 각 7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정원 자율책정 기준은 교원·교사 확보율 각 90% 이상 및 교지·재산 확보율 각 55% 이상이었다. 또 교지·재산 확보율을 2006학년도 각 85% 이상, 2007학년도에는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해 대학의 정원 늘

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공립대는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학과(전공) 신설도 억제하며, 이공계 정원의 인문·사회계 열로의 전환도 불허하되 총정원 범위 내에서의 모집단위간 정원 조정, 학과 명칭 변경, 모집단위 통·폐합 등은 사전 조정 절차 없이 자율화하도록 했다. 국·공립대 가운데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를 적극 권장하고 교육·직업 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립대 사범계학과중 수요가 적은 모집단위는 일반학과로의 통합 또는 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수도권 사립대도 입학정원을 동결하는 대신 신(新)성장동력 및 물류 분야, 국가전략 분야 등 사회 수요를 반영한 모집단위 폐지, 통·폐합, 정원조정 등은 총정원 범위에서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사립대는 정원 자율책정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증원인원의 2배를 감축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히려 지방대 특성화 및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과 연계해 과감한 정원 감축 및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권유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건·의료 인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의학 관련 인력이 공급과잉 상태여서 입학정원 확대 신청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하고 일반학과의 명칭을 보건, 의료, 의학, 한방, 한약 등 보건·의료 관련 학과와 유사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임원서명 의무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 법인 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규칙은 6월부터 사립대와 전문대를 운영하는 법인에 적용된다. 초·중·고교에는 관한 교육청 실정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일부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임원 도장을 따로 보관하면서 멋대로 찍거나 이사회의 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사학비리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39개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의록 등에 임의 날인한 법인이 10곳,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회의내용과 다르게 회의록을 작

성한 곳이 18곳 236회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 **사범대 임용시험  
내년 입학생부터 폐지**

학교 소재 지역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범대 졸업생에게 1~3.5점(100점 만점)의 가산점을 주는 '사범대 지역가산점 제도'가, 현 사범대 재학생까지만 유지된 후 폐지된다. 현행규정상 사범대 재학생은 4학년 졸업반 때 임용시험을 치른 뒤 낙방할 경우 이듬해부터 무한정 재응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가산점 폐지 방침에 따라 지금의 사범대 재학생에 대해서는 3년까지만 가산점을 주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과조치에 따라 2008·2009년에는 가산점을 받는 사범대 졸업생과 그렇지 않은 사범대 졸업생이 함께 교원임용시험을 치르게 돼 가산점 유무에 따른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 **대학원도 정원 축소**

정부가 대학에 이어 대학원의 구조조정 및 정원 감축에 나섰다. '외국 석·박사 선호현상'으로 휴·퇴학자가 급증하면서 연구기능이 위축되고 학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2005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발표, 대학원 입학정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자율책정기준을 2005학년도에는 교원·교사확보율 각 1백%와 재산·교지확보율 각 70% 이상으로 높여 사실상 증원을 막았다.

2004학년도의 경우 교원 및 교사(건물) 확보율 각 90%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부지) 확보율 각 55% 이상이었다. 특히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을 막기위해 '추가기준'을 만들어 모든 대학이 대학원 신설시 충족시키도록 했다. 즉 전문대학원을 만들려면 관련분야 학부 및 특수대학원을 폐지토록 했으며 신설분야도 반드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못박았다.

또 자연계 및 의학계열에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만들려면 "확보해야하는 전임교원 7명중 4명 이상은 국제수준 학술지 또는 전국규모의 전문학술지에 최근 5년 이내의 2편이상의 논문발표"에서 "3편이상의 논문발표"가 필요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증원 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원 인원의 2배를 감축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90년

대학원 수 및 재학생이 303개에 8만7163명에서 지난해 1010개에 27만2331명으로, 대학원 수는 3.3배, 학생수는 3.1배나 급증했으나 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수요는 늘지 않기 때문이다.

### ● 2008년 입시부터

#### 대학 선발지율권 확대

현재 중3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내신성적이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그 만큼 수능의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2008학년도부터 수능의 반영 비중을 낮추고 내신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대학이 특성에 맞는 학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발 자율권 확대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제는 올해 안에 공청회 등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실시되 교사의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 후속대책에서 교원평가제의 경우 관련 단체의 의

견을 들어 올해 말까지 평가 방안과 모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8월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 지방연구중심대 사업단

#### 3개 선정

과학기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방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따라 올해 3개 지방연구중심대사업단이 선정된다.

과기부는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는 4년제 이상의 이공계 대학을 대상으로 지방연구중심대사업단 신청을 받아 7~8월중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3개 사업단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연구중심대사업단은 권역내 3~4개의 우수 이공계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2007년까지 권역별로 1개씩 모두 10개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3개 사업단 중 2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지원이 시작돼 정부지원금 25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참여대학의 대응자금 5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이 지원되며 내년부터 지원되는 1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예산반영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올해와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기부는 대학사업단에 대해 초기에는 대형연구거점 역할을 담당하도록 집중지원하고 이후에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 지역특화 분야와 관련해 가장 우수한 1개 대학의 특정학과 또는 학부를 지역의 연구중심대로 육성, 지원할 계획이다.

### ● 교육혁신위,

#### 사립학교법 개정안 마련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사학비리 연루자의 학교복귀(현재 2년경과 후 복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친인척 이사 선임비율이 20%로 제한되고 지역인사나 학부모 대표 등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참여하는 공익이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안을 7, 8월 중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운동본부도 올해에는 법 개정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설립자나 이사장이 친인척으로

이사회를 구성, 전횡과 비리를 일삼는 것을 막기 위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1조 2항은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1999년 삭제된 공익 이사제(학교 법인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 조항을 부활하고, 사립학교 교원을 뽑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공개적인 교원 임용제도를 의무화했다. 사립학교 문제 발생 때 임시 이사회의 조속한 파견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등의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 '이공계 채용목표제'

#### 11월말까지 시행

정부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일정비율의 이공계전공자를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부응하는 기관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공계 채용목표제'가 이르면 11월말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공계 채용목표제를 위한 사전 기획연구를 10월말 끝내고 11월초에 시안작성을 완료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말이나 12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이공계 채용 목표제에 관한 사전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10월까지 계속되는 사전 기획연구를 통해 정부산하기관의 이공계 채용현황 조사, 관계 전문가에 대한 설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공계 채용목표제의 핵심내용인 ▲이공계 채용 목표비율 ▲시행대상 기관(정부 산하기관 중 출자 또는 출연기관 여부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농과대 재학 농민 자녀

#### 등록금 지원

올해 2학기부터 농업인 자녀로서 농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이 무료로 지원된다. 농림부는 교육 여건이 취약한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차세대 영농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학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올 9월부터 대학 등록금 보조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등록금 보조사업의 대상자는 부모가 3년 이상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국 53개 농업계열의 대학생 4200여 명으로, 재학중 농업경영 등 6개 과목과 실습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국·공립대의 경우 등록금 전액이며,

사립대는 국·공립대 등록금의 최고 수준(162만원)이다. 재원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에서 조달된다. 이를 위해 7월중 마사회 특별적립금에서 186억 원을 조달, 장학복지재단을 설립한다.

농림부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등록금 보조사업 신청을 받은 뒤 7월말까지 대상자 은행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 ● NURI사업, 79개 지방대에

#### 1조 4200억 지원

앞으로 5년간 1조 4200억 원을 지원 받게 될 지방대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방에 있는 전체 4년제 일반대의 58.9%(79개대)만이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의 지원대상에 올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30억~50억 원을 지원하는 대형 사업단 25개, 10억~30억 원을 투입하는 중형 사업단 25개, 10억 원 이하를 주는 소형 사업단 61개를 선정했다.

사업단이란 지방대(전문대 포함)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기업체 등이 연계해 계획된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한 단체를 말한다. 이 사업에서 배제된 대학은 앞으로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선정 결과=50억 원이 지원되는 '차세대 이동통신 및 서비스

인력양성 사업'은 한밭대, 충남대, 배재대, 목원대, 대전보건대와 대전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통신 충남본부, SK텔레콤 중부 네트워크본부 등이 사업단을 구성한 경우다. 지방대는 기업 등과 연계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면 기업들은 졸업자를 채용하게 된다.

권역별로 선정된 사업단과 올해 지원액은 대구·경북이 21개(412억 원)로 가장 많다. 이어 ▶광주·전남 16개(325억 원) ▶부산 12개(252억 원) ▶충남 10개(214억 원) ▶경남 9개(172억 원) 등 순이다. 선정된 대형 사업단 25개 가운데 이공계 분야가 24개, 인문·사회계 1개로 이공계가 집중 선정됐다. 지방대가 포함된

사업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집중 양성하도록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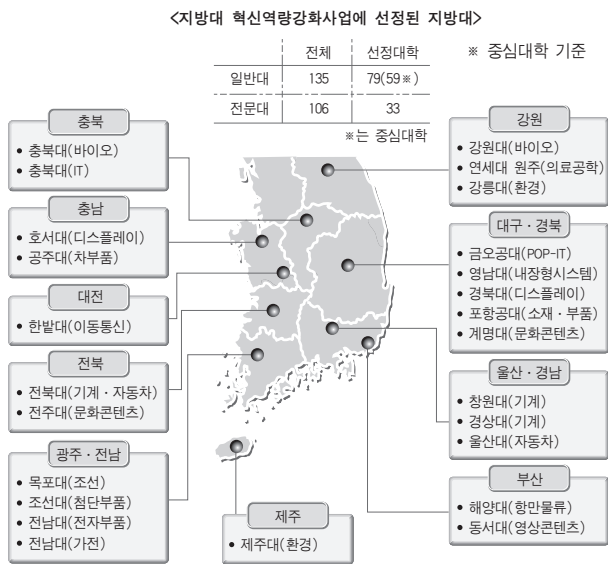
지역 전략산업은 ▶기계·자동차 6개 ▶정보기술(IT) 7개 ▶생명기술(BT) 4개 ▶나노기술(NT) 4개 ▶문화기술(CT) 3개 ▶물류 1개다. 부산에선 한국해양대학을 중심으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추진되며, 대구·경북지역에선 경북대를 중심으로 모바일·디스플레이산업 인력양성 사업이 시작된다. 광주·전남에선 목포대학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전남대를 중심으로 한 광전자 부품산업 인력양성이 중심과제다.

◆ 지방대 '살생부' = 지방의 135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11곳이 454개의 사업단을 구성해 신청서를 내 평균 4대 1이 넘는 치

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NURI 사업의 재원은 지금까지 지방대에 공평하게 나눠줬던 각종 지원금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 탈락하면 앞으로 국가 지원을 받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지방대 관계자들은 NURI 사업을 '지방대 살생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부산대 등은 주요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충북대는 대형, 중형, 소형에서 모두 6개 중심대학(126억여 원)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미 2005학년도 대입에서 학부 학생 입학정원을 7271명(대학 28개대 4073명, 전문대 32개대 3198명)을 감축했다. 또 대학 전체의 신입생을 매년 60%, 그리고 사업에 직접 참여한 학과·학부는 90% 이상 정원을 채워야 한다. 교원 확보율도 2008년까지 대학 전체로는 60%, 사업 단위 학과 등은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이번 사업에 뽑히지 못한 학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중간평가를 실시, 추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일부 사업단을 탈락시킨 뒤



새 사업단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 NURI=대학과 지자체·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을 말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08년께 지방대 졸업생 취업률을 지난해 57.6%에서 70%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인권위,**

“**대학 시간강사 처우 불합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시간강사는 그 지위와 교육 활동적 가치를 인정받고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근무조건과 급여 등에 대한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비정규직 대학교수노조가 대학 시간강사의 차별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낸 진정사건에 대해 그동안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전문가 자문청취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간강사들이 명시적 고용 계약이 없어 사회보험 등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도 60여 만원에 그쳐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

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위는 “시간강사 제도는 특정분야 전문가 등을 일시적으로 위촉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전임교수 채용영역에까지 확대 적용돼 2002년 현재 4년제 대학 135곳에서 교양과목 55%, 전공과목 31%를 담당하는 등 하나의 직업군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 **산자부, 국내 10개 대학**

**표준화강좌 개설**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 국내 10개 이공계 대학 학부생 과정에 올해 2학기부터 산업 표준화 강좌가 처음으로 개설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표준협회는 미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표준화 마인드 조성 과 표준 인프라 저변확대를 위해 하반기부터 대학 학부과정에 표준화 강좌를 개설기로 하고 전국 10개 대학과 강좌내용과 규모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표준화 강좌는 외국의 경우 일부 대학 석·박사 과정에 개설돼 있지만 학부생들을 위해 강의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준화 강좌 실시 대학은 고려대 서울캠퍼스 및 서창캠퍼스,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한신대, 원

광대, 배재대, 신라대, 대불대, 대구가톨릭대 등 10개대 11개 캠퍼스로 강좌는 2~3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2~3학점의 교양과목으로 신설된다. 특히 각 대학은 표준화 강좌를 해당 대학의 교수는 물론 기업,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표준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하는 팀티칭(Team teaching)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례중심의 강의와 기업실습 등으로 산학협력의 의미를 강조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강의를 위해 공통의 교재를 제작,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참고 자료를 서비스하는 한편 산·학·연 표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강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강좌를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국가표준정보센터(KSSN)에 이들의 인적사항을 수록, 기업에 홍보하고 관련 산업계 취업을 유도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간 교육기관을 통한 표준화 교육이 전무했고 인력 양성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대학이 현장중심교육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표준인력의 배출은 업계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